

# ISSUE & FOCUS

윤 일병 사건으로 드러난 軍혁신 과제  
‘국방선진화’라는 큰 그림에서 출발해야

김소열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윤 일병 사건으로 드러난 軍혁신 과제 ‘국방선진화’라는 큰 그림에서 출발해야

김소열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남 상병 폭행과 성추행 의혹 등 군 병영 생활의 문제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인간존엄성을 짓밟는 수준이었다. 군부대에서 얼마나 많은 인면수심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묵인돼 왔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이번 군부대 사건사고는 군에 자식 보낸 부모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러한 안하무인격 군 생활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아니면 동조자인지, 방관자인지 알 수도 없다. ‘철들게 하고 사람 만든다’는 군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개탄스럽다. 알려진 것들은 꺾다 못해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군의 혈관과 장기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활개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

사건이 터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전군 실태조사다, 인성교육이다, 민간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군 수뇌부를 믿고, 기대감을 갖고 있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들은 지금 당장은 장성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있지만,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런 의심은 군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2005년 1월 훈련소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2005년 6월에는 경기 연천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소초에서 김 모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던 바 있으며, 2011년 7월 해병대 병사가 총기를 난사했을 때도 국방부는 지금 취하고 있는 유사한 방안들을 강구한 바 있다. 최근 신임 육군 참모총장이 내놓은 ‘동기생 분 소대 구성’ 의견도 깊은 생각 없이 발표한 땀 질 처방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군의 체질을 바꿀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의 제도화와 실천을 담보해야

다시 말해 여론 무마용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폐기 될 근시안적인 대책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일이다. 한선재단이 8월 27일 긴급히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세미나를 한 것도 군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이날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대증요법(Symptomatic treatment)과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이면서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로 민간의 시각에서 군의 문제를 진단한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군대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집약적 군인가, 기술집약적 군인가? 라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국방의 수준에 대해 “사병은 2010년대 사병이고, 무기는 2000년대 수준이다. 또 장교들의 판단은 1990년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며, 내무반 등 군부대 시설은 1980년대 수준일 만큼 불일치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군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자살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36%였던 자살자 비중이 2000년 이후에는 54.6%에 달하고 있다. 최근인 2012년과 2013년에는 65%, 68%로 높아졌다.

또 국제적, 국내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경제적인 병력운영과 21세기형 국방력이 창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35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중 중경상비, 즉 병력운영 비중이 70%에 달한다. 30%인 10조 원 가량이 무기도입 등의 자본재에 투입되는 정도다 보니 장기전략 개발은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저출산 현상 심화, 징모병행제 등 다양한 대책 열린 자세로 대책 마련해야

그러면서 김 교수는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은 여러 제약요건으로 인해 유급지원병제 확대를 통한 징모병행제(징병제+모병제)를 제시했다. 모병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도 55.7%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므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4.4% 만이 ‘군 현대화와 장병관리 해결 등을 위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출생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책수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 가량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8.6명이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가 말해주듯 현재까지는 징집대상인구가 과잉인 상황이지만, 2016년 이후에는 징집대상인구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조건을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보다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 국방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은 2010년까지 20여년간 병력을 기존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축했고, 육·해·공군이라는 전통적 구조를 깨고 통합시켰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시기 병력을 18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줄였고, 징모병행제를 실시했다. 프랑스는 1996년 모병제를 시작해 2003년 완전모병제로 전환했고, 병력도 절반 수준인 23만 명으로 축소했다.

김 교수는 징모병행제 또는 모병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의 또 다른 발제자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연대장을 역임하고 대령으로 예편한 박 교수는 병영 사고 예방책 타당성은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지향성 등을 평가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일병 사건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관심사병(A,B,C급, 전체병력의 23.1%)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적합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지향성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의 자율권 확대,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중요한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병사들과 동고동락해야 할 소대장과 부소대장에 의해 병사들이 관리되어야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가능한데, 상급부대 지시이행,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 기타 부과된 과업에 허덕이다보니 병사들을 살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간부들이 내무반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참병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22사단 소대장은 현장을 이탈했었고, 28사단의 경우에는 간부가 구타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참가하기도 했다.

### **병사를 통제 대상 아닌 ‘군복 입은 시민’으로 생각해야**

초급간부 역량이 미흡한 원인은 우수한 청년들이 장교직을 지원하지 않는 점과 상급자 및 상급부대의 세부간섭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따라서 우수한 젊은이들의 군 장교 양성제도, 복무연한 단축(28개월→24개월),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군 병사들은 대학재학 이상이 85%에 달해 세계에서 최고의 학력을 갖춘 우수 집단이다. 그러나 군에서는 과거의 습성대로 감독 없이는 병사들에게는 독립적 행동이나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다. 실제 간부로 임명되는 선임자 없이 병사에게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박 교수도 “병사들을 보호 및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군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권한위임은 병영문화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군의 간부화’로 한국군의 전투력을 급격하게 팽창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선재단에서는 2011년 국방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선진화정책시리즈인 ‘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라는 책자를 내놓은 바 있다. 국방선진화 중심과제로 ▲북한위협의 안정적 관리 ▲전력증가의 선진화 ▲국방경영의 합리화 등에 관한 의견

을 제시했다. 3군 균형 전략 발전 등 군의 구조개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물론 우수초급간부 확보와 양성, 민간 전문인력 활용, 정신전력 보편성 강화, 근무와 휴식의 조화, 병사들에 대한 책임 부여, 바람직한 병영문화 형성 노력 등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에 새롭게 요구되는 군 혁신의 내용은 국방전력의 강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수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 병영인권개선, 국방력강화, 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다중적인 숙제를 앞에 두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심기일전하여 군의 전투력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국방부가 내놓았던 단기대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됐다. 이번마저 도돌이표가 된다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